

우석균 칼럼 -

한미FTA 4차 협상을 앞두고
볼리비아의 자원 국유화
유럽의 무슬림 마녀사냥

5면
7면
8면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1, 2, 3, 4, 5면

16호 2006년 10월 21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북한 핵실험 관련
특별호

유엔 대북 제재 조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PSI와 경제 제재 모두 동참 말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의 예상대로 군사 제재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시 정부가 북한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이매뉴얼 윌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찔렀다. “미국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정치적·심리적 문제를 이라크에서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은 이라크 이외의 지역에 개입하거나 분쟁을 만들 만한 정치적·군사적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미국

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언어적 실행’ 외에는 한반도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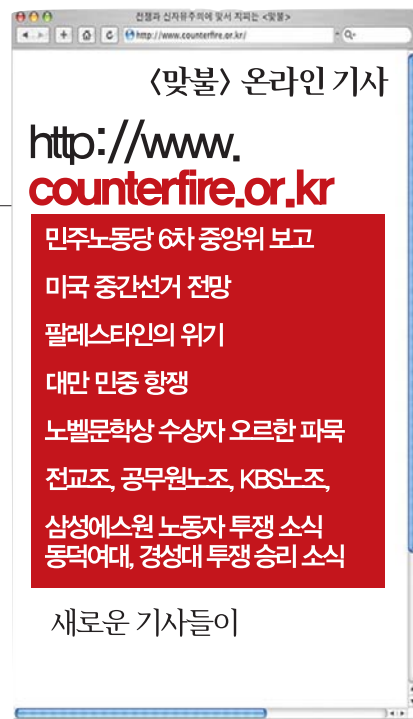
최근 콜린 파월 전기가 출판되자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가 아니다”는 럽스펠드의 말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부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네오콘의 대북 강경 입장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럽스펠드를 비롯한 부시 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원하는 것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부시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세계가 단합해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성과를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북한 핵무기를 반대하는 데까지만 일치할 뿐, 대응 방안에서는 미국과 의견이 차이를 보여줬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조작된 정보를 근거로 침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선언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실행한 나라에 대해서는 군사 제재를 하지 못하는 모순과 무능력을 드러냈을 뿐이다.

>> 2면으로 이어짐



>>> 1면에서 이어짐

유엔 안보리는 군사 제재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북한의 목을 조르는 혹독한 경제 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다. 경제 제재는, 그렇잖아도 주민의 삶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하는 체제 아래서 고통받아 온 북한 주민들을 괴롭힐 뿐이다.

유엔은 13년 동안의 경제 제재로 1백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을 죽인 전력이 있다. 이 가운데 50만 명이 어린이였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대북 제재 결의안은 “사치품”을 금지 품목에 끼워넣어, 경제 제재가 북한의 지배층을 겨냥한다는 인상을 풍기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 상품과 기술의 북한 유입 금지”라는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가 지적하듯이, “통상적으로 이중용도 제품의 용도 판정에는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 예컨대 쌀이 군량미로 쓰일 수 있다는 시비는 쌀 지원이 시작된 이래 1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석유는 미사일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등 군수장비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이밖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 화학제품 등이 이중용도로 규정될 수 있다.

핵실험 뒤에 한나라당은 “북에 준 모래 값이 군부로 흘러갔다”고 비난했는데, 현금이 유입되면 북한 당국이 이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든 경제 교역에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핵·미사일 관련 물품과 함께 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한통속 중국

경제 제재의 효과는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심한 제재는 피할 듯하지만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경제 제재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압록강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2003년 초에도 북한에 베이징 3자회담 참가 압력을 넣기 위해 원유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의 1백 퍼센트가 중국에서 오는데도 말이다. 1994년에는 핵사찰을 받으라며 북중간 세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동해관을 폐쇄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북중 무역의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3.5퍼센트 상승시켰다(이영훈, ‘북중교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중 교역의 축소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해외원조와 수입량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 연간 42만 톤 가량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 식량부족과 생필품 물가 인상으로 평범한 북한 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8조 f항에 선박 검색도 포함하고 있는데, 북한 선박 검색이 본격 추진되면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북 제재는 기껏해야 북미간 적대적 공생 효과, 즉 북한 내부 결속과 선군정치 강화만을 가져올 것이다.

김하영

어쩔 수 없는 친제국주의 노무현과 열우당

김하영

노무현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런데 청와대는 더 이행할 게 없다는 기막힌 고민에 빠졌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제재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터라 유엔 결의안에 담긴 수준은 이미 다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쌀과 비료와 시멘트 등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를 “유

엔 결의안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하더니, 유엔 결의안에 선박 검색 관련 유보조항이 달리고 중국 정부는 이미 불참 입장을 밝혔는데도 눈치만 보고 있다.

노무현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강력한 제재 압력이라는 강경한 대응”도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두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마당에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불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과 대화하는 다중인격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김근태·천정배·정동영 등은 노

무현과의 차별화로 주목받으려 애쓰며 PSI 확대 참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무현보다 정도는 덜해도 일관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천정배는 “핵개발과 직간접 관련 있는 물자의 교역 금지”를 지지하고 있고, 정동영은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 “협상을 위한 제재”라는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김근태는 “무력 충돌을 배제한 대북 제재”에 지지의 뜻을 밝혀 ‘여의도의 햄릿’을 벗어난 게 아님을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PSI는 물론 경제 제재도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우익들은 핵실험이 대북 포용 정책 탓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세계 유력 일간지 몇 개만 읽어봐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

이라고 분석했듯이, 북한 핵실험은 압박 정책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북 정책의 문제는 “무조건 양보”하고 퍼준 데 있지 않다. 그는 차라리 상호주의에 가깝게 행동해 왔다.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고 미국

의 유연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그의 기본 구상에 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도 핵문제 해결 뒤로 미뤄버렸다.

노무현은 이런 논리로 이라크에 파병했고 부시의 전쟁 동맹이 됐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이 구상은 한번도 작동한 적이 없으며 이번 북한 핵실험을 통해 완전한 파산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당장 자이툰을 철수시키고, 군비 증강과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인용해도 됩니까?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며] …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려면 더 많은 폭탄을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잔인한 폭격이 될 것이다.”

—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북핵 문제에 한국민의 30퍼센트가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는데 … 섭섭하다.”

— 주한 미 대사 버시바우

강재섭: “평화운동을 했던 여러 단체들은 … 한 반도 비핵화 운동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재오: “이러고도 우리가 노무현 정권을 물러나라고 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반핵세력

이 아니다.”

— 갑자기 반핵 평화주의자가 된 한나라당

“유례없는 위기 국면에 미력이나마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과 소명이 있다는 사명감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에 임하고자 한다.”

— 슬그머니 복귀한 한나라당 공천비리범 김덕룡

“핵폭탄이 터지는데 무슨 파업이냐고, 또 난리나겠군. … 신문을 장식할 기사 제목들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랐다. … ‘옆친 핵 위기에 덮치는 파업’”

— 노동평론가 하종강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 <한겨레>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한 금태섭 검사를 징계한 대검찰청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제가 신청했던 증인을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지금 이 구조에서 표결을 해 본들 다 부결될 것입니다.”

— 이견희, 정의선, 론스타 회장, 김&장 대표 등의 국감 증인 신청이 무산된 후 한탄하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미국은 북한 핵실험 비난 자격 없다

핵무기 1만여 기 보유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거부

김하영

걸프전(1991년)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호너는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게 핵무기는 심각한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끔찍한 사람들이다.’ 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미국은 1만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7천6백50개의 핵탄두는 실전 배치돼 있다.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잠수함 탑재 핵탄두만도 1천7백 기가 넘는다.

미국은 1천 회가 넘는 핵실험을 실시했고, 현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미국 지배자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더구나 미국은 핵무기 감축은커녕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부시 정부는 2002년 1월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방침을 밝혔고,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핵공격 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군장성들의 항명에 가까운 방해에 부딪히면서도 말이다. 이것은 명백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었다.

미국의 이중 잣대도 핵무기 확산을 부채질했다. 미국은 자신의 중동 경비견인 이스라엘의 막대한 비밀 핵무기를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지난 3월에는 인도에 대

해 30년 동안의 민간 핵 기술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 NPT 비가입국과 민간 핵 기술 협력을 맺는 것이 NPT 위반인데도 말이다. 잠재적 적국 중국에 맞서 인도를 미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핵무장 해제를 위해 … 신의 · 성실의 자세로 협상을 꾀한다”는 1968년 NPT 조약 제6조의 의무를 지난 30년 동안 무시해 왔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지미

1천여 회에 이르는 핵실험을 한 미국 네바다주 핵 실험장 - 2006년 2월 핵실험 장면

카터가 한 마디로 요약했듯이, “미국은 NTP를 약화시킨 주범이다.”

개빈 맥코맥 호주 국립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북한에 ‘범죄 국가’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2003년 UN헌장에 반하여 전쟁을 벌였으며, 차세대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선제적으로 그리고 국제법과 무관하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 나라에는 어떤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핵치핵?

상당수 남한 우익은 북한 핵실험을 기회로 핵무장 열망을 현실화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핵 야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남한은 핵무기 개발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외압으로 중단했다.

2년 전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비밀 핵실험을 적발당한 것이 폭로된 바 있다.

당시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핵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한 자극제가 됐을지도 모른다.

핵우산

남한은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위험한 국가다. 2001년 현재 27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축적하고 있는데,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다면 이것으로 3천3백75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눈치를 좀더 살피는 다른 우익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우산 제공 문제는 벌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안건으로 올라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양국이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이를 공개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핵폭탄 · 핵지뢰 · 핵미사일을 남한에 들여왔다. 그리고 1991년에 이 핵무기들을 철수할 때까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소위 ‘NCND 정책’을 썼다.

사실, 지금도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장거리 핵 공격 연습을 계속해 왔다.

남한 지배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남한 땅 안에 들여오려 한다면 한반도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전쟁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위험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핵무기 경쟁은 공포를 부추길 뿐,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의 호들갑은 핵무장 포석

일본의 호들갑도 위선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만도 총 43.1톤(2005년 기준)이나 되는데, 이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2천여 배에 이르는 양이다.

특히 일본은 내년부터 매년 4ㄱ8톤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 동안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도 문제 삼았는데, 이 분야에서 일본은 북한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2003년 3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로켓에 의해 첩보 위성을 쏘아올려 공중에서 북한 정찰 활동을 시작했다. 또, 우주에 쏘아올린 H2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다.

이처럼 무기 강국인 일본이 북한 핵실험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은 이를 계기로 핵무장을 하려는 포석이다.

매년 4~8톤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맛불〉 창간을 축하하며

‘다함께’의 주간지 〈맛불〉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KTX 투쟁이 시작된 3월부터 함께해 왔던 ‘다함께’ 동지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동지들의 투쟁은 소금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다함께’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 민세원



북 핵실험을 구실로 이란 공격 위한 압력을 높이는 부시 정부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는 북핵 ‘보유’에서 ‘이전’으로 관심이 이동했음(이른바 ‘레드라인’)을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2003년에 분명히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3년 반 뒤에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퇴는 부시 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레드라인’(정치적으로 꼭 지켜야 할 안전 한계) 변경은 북한 핵무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이란을 손보지 않으면 핵무기를 이전받아 더 위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광들은 북한 핵실험을 이란 공격을 위한 압력 증대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댄 질러맨은 북한 핵실험 직후 이렇게 말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곧 이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서둘러 채택한 것도 이란과 관련이 있다. 유엔 본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16일]에 시작하는 주]부터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놓고 안보리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임이사국 간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부시 일당이 떠들썩하게 내뱉는 거친 말들과는 달리, 미국은 지금까지처럼 북한에 대해 별 뾰족한 대책을 시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호주 출신의 한반도 핵 전문가인 피터 헤이즈에 따르면 “미국에게는 북한 핵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관심사가 있다.” 현재 부시 정부의 훨씬 중요한 다른 관심사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초점인 중동이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초점 — 중동

사실, 중동의 중요성은 부시 정부 동안 새롭게 부상한 것이 아니다. 2000년 클린턴 방북 계획이 무산된 것도 그 중요성이 중동 협상에 밀렸기 때문이다.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웬디 서먼은 안문석(《북한이 필요한 미국 미국이 필요한 한국》의 저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동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평양에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온 게 아니라 역력이 없어 다루지 못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수 있다. “의도적 무시 전략”이라고 다소 도도한 이미지로 포장된 부시의 대북 정책은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임시변통” 또는 “무대책”이라고 하는 편이 차라리 정확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려)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한 한반도 문제를 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라크 전쟁이 눈앞에 있던 2003년 초에조차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미국 제국주의는 세계를 대상으로 투쟁하며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부시가 지금 주력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제국주의가 거기서 패배한다면 북한을 압박할 힘은 더 약해질 것이다.

김하영

맑스주의자는 북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산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려면 이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북한 핵 반대와 미국 책임론의 비율을 어떤 균형으로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만약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북핵 반대를 전제로 내세우거나 북한과 미국을 공평무사하게 비난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컨대 진보정치연구소 ‘희망설계본부’는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판을 바꿔버렸다”며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막는 일이다” 하고 주장했다. 외교계에서 CIA 요원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친미 성향인 “반기문의 역할”을 논하는 것도 그렇고, 명의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어느 당 연구소인지 알기 어려운 진술이다.

또, 지난 13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백순 ‘진전’ 기관지위원장은 “현재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북핵”이라며, 압도적 비율로 미국을 비난하는 ‘다함께’ 입장이 결국 북핵에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문제의 본질은 테러리즘이었는가? 9·11 직후 국제 반전 운동은 ‘테러 반대’와 ‘전쟁 반대’ 하는 식의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사태의 핵심 — 테러를 발미로 한 미국의 전쟁 물이 — 을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보진영은 좌파민족주의 세력의 핵심 부분이 북한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 없이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미국의 패권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한 추종자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서, 또는 진보진영 내 핵 역지력 주장을 비판하려다 핵심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

핵 역지력?

물론 진보진영 내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무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전쟁 역지력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그런 경우다. 이는 “북한 핵무기가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전쟁 역지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핵 1만여 기 가운데 7천6백50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대 6□7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아직 낮은 기술 수준에 의한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핵 공포의 균형”라는 지극히 냉전적인 용어가 지닌 정치적 문제점은 제쳐두고라도, 이런 비대칭적인 균형을 두고 “핵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기술에 관한 보도를 보면 종종 과장을 발견하게 된다. <한겨레>는 “[19]89년 5월 김책공대의 연구진이 발표한 ‘실내온도하 핵융합 반응의 실현’이란 수준급 논문은 세계 물리학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10월 14일 치).

그러나 최무형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상은 핵융합”(물리학 용어)은 아직까지 물리학에서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유타대학 화학자 2명이 “상은 핵융합” 논문을 발표했으나 1년 뒤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대학에서 쫓겨났다.

또, 전쟁 역지력 확보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주장처럼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충돌이 일어난다 해도 이것 역시 악순환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줄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는커녕 더한층의 불안정과 긴장을 부를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일본·남한·대만·호주 등의 핵무장을 자극해 군사경쟁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민경우 한미FTA법규본 정책기획팀장은 “객관적인 사태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핵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게 예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과 남한 등이 핵무장을 하기 전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거나, ‘북미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장을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진보정치 294호>).

물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시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전쟁 역지와 안전보장”을 특별히 언급

한 것은 핵무장 확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 자체보다 이런 효과 — 동맹국들의 핵무장 — 를 더 우려한다.

하지만 핵확산금지 체제의 위신이 실추한 마당에 미국이 동맹국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월러스틴이 지적하듯이 “미국 헤게모니는 쇠락”하고 있고, 이 점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던 때와 비교해) 주변국의 핵무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명백하다.

차베스

북한 판료의 처지에서는 핵무장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불가피한” 수단일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노동자·민중운동의 처지에서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핵 역지력이 대안이라면 노동자·민중운동은 할 일도 없고 가치도 없게 된다.

스탈린이 서방 지배계급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사용했던 위협 무기 중 하나인 서방 공산당들의 가치는 1949년 소련이 핵폭탄 실험을 완료하고, 1953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뒤 추락했다. 코민포름이 이용가치가 없어져 1953년에 기능을 멈춘 것은 이와 관계 있다.

핵무기는 무엇보다 세계 민중의 연대에 부정적 영향만을 미칠 뿐이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차베스가 세계 민중의 지지를 받는 까닭은 핵무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 정부와 국내 우익의 압박 속에서도 차베스가 개혁을 제공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고무하기 때문이다.

김하영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반대 운동은 숨을 고를 때가 아니다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봉쇄를 결의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 봉쇄와 동시에 남한의 사회운동에 대한 봉쇄도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사회운동이다. 이라크 한국군 파병연장이나 레바논 파병도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선전될 것이다.

또, 11월 ‘총궐기’를 앞둔 시점에서 속도를 내도 모자랄 한미FTA 반대 운동에도 북핵 문제는 당연히 악재이다. 벌써부터 한미FTA 협상은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별도 협상조차 주의를 끈다며, 아예 화상회의로 ‘정점 사항’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북핵 위기로 다른 사회적 의제가 가려져 있는 이때가 한미 양국 정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이 숨을 고를 때가 아니다. 힘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낼 것인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대중들에게 더 공개적이고 광범하게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어야 함을 알리는 것이다. 부산에서 과감한 길거리 ‘대중 선통’과 여기에 수만 명의 시민이 호응한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함을 잘 보여 주었다. 운동이 더 과감하게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필자가 한미FTA 관련 모임에서 발제자나 연사로 나선 지 6개월쯤 됐다. 대중과 호흡이 잘 맞은 때도,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대중의 호응이 있었던 연설이나 강연은 항상 몇 가지 요소와 결부돼 있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체적 폭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추상적 설명보다는 구체적 예가 더 효과적이다. 한미FTA가 교육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설명한다면 아마 줄거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 시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에 연세대가 미국 수능시험을 대학입시에 넣으려 한다. 지금은 교육부가 이를 못하게 막을 수 있지만 한미FTA가 타결되면 못 막는다. 지금도 얼마나 과의 비용이 많이 드나? 그런데 미국 수능시험 사교육까지 받아야 할 판이다. 고등학교 수험생 등 부모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미FTA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평가시험을 한국에 다 개방시킨다. NCLB(No Child Left Behind)가 그것이다(이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부시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맥그로윌이라는 회사다). 한국의 사학재벌들은 등록금 늘어날을 수 있으니 대환영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예 미국 사교육까지 시켜야 할 판이다.’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한 노동자는 필자에게 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말하지 못하는지를 질책했다. 맞는 말이다. 폭로를 위한 구체적 사례들을 모으고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정치적 입장의 올바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를 현재의 전체적인 상황과 별도의 시간으로 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미FTA를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앞서 든 교육의 예를 본다면 지금 벌어지는 사교육

의 폐해, 강남 8학군의 서울대 입학률 같은 교육 불평등과 이를 더 심화시킬 한미FTA를 연결시켜야 한다.

대안

정치적 입장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 문제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 조급성을 지적하거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데 비해 한미FTA 자체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많다. 각론에서는 반대가 많지만 총론에서는 ‘한미FTA 반대는 쇄국’이라는 정부 선전이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동 진영 일부에서는 ‘졸속 추진’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역사가 길지 않으며 FTA 반대 운동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대안 논의는 사회운동 내에서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대중은 ‘신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만을 듣고 있다.

운동의 초기에는 체제 내 반대파의 주장이 흔히 대중운동의 주장이 됨을 상기하자. 신자유주의 반대가 쇄국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되 그 대안을 ‘우리는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FTA는 안 된다’고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타협일 뿐 아니라 한미FTA가 FTA 플랫폼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론도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 졸속 추진 등의 사실을 FTA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유연하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운동 초기에 더욱 어렵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서로 주장이 다른 운동들의 대오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은, 운동 진영의 입장 통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여러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의와 자신감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싹과 영화만을 이야기했던 한미FTA 반대 운동이 필수적 공공서비스의 사기업화나 교육·의료 양극화, 환경의 악화 같은 신자유주의 일반의 문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가? 또, 기업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공간이 이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는가?

상황이 어려울 때 항상 이를 타개하는 것은 앞서 있는 사람들의 결의였다. 필자가 보기에 한미FTA 반대 운동의 진전이 가르쳐 주는 것은 대중의 고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대중의 심리적 공황보다는 작게,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사회운동을 위축시킬 정도로는 크게, 적절히 통제하려는 정권의 공작이 한창이다. 상황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것은 또다시 반전평화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강화라는 길뿐이다. 제주에서의 4차협상을 앞두고 지금, 11월의 투쟁을 앞두고 지금, 한미FTA 반대 운동은 숨을 고를 때가 아니다.

10월 29일(일) 저녁 8시 KBS 스페셜에서 이강택 PD가 제작한 광우병과 기업 이윤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이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투쟁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현재 전국 2백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중 1백40여 개가 폐쇄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현장 활동가들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고 있다는 점과 투쟁의 동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일부 간부들(특히, 경남본부장) 가운데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외노조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말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1.5권’뿐인 직장협의회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직장협의회 때보다 후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탄압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법을 수용했는데 인사 문제를 제기

해도 소용 없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5개월째 답변이 없다. 교섭을 체결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근무시간에 홍보전을 하려 해도 단체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체행동권은 말할 것도 없고 단결

권조차 심각하게 제약하는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2007년 초로 바짝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나 조만간 닥칠 구조조정 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견 두 손 두 발을 다 자르고 중무장한 적과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경남본부 일부 대의원들은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각 지부별 투쟁이 나름대로 힘차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부별 투쟁에서 느낄 수 있는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10월 25일 예정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집회가 빨리 확정돼서 강력하게 건설될 필요가 있다.

이재열(공무원노조원/해고자)

〈맛불〉 판매 보고

북 핵실험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다

북한 핵실험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발간한 〈맛불〉에 회원과 비회원 독자,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라는 점과 그 어떠한 유엔 제재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판매 부수도 늘었다. 특히 대학 공개 판매 부수가 14호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또, 대학 회원

들의 개별 판매 부수도 갑절 이상 늘었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지금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패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유엔 제재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전쟁 물의를 저지하기 위한 반전 운동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신문판매를 해야 한다.

Forums

서울 중부지역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
10월 18일(수) 오후 8시
장소: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시립대
자본주의와 전쟁
10월 19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전농관 210호
문의: 011-9347-1075

성균관대
한미FTA,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10월 25일(수) 오후 6시
문의: 010-6689-0088

단국대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10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이부학관 105호
문의: 010-3122-1905

대학 맑스주의 포럼 & 지역 사회 포럼

고려대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10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0-3181-5032

서울교대
자본주의와 전쟁
10월 26일(목) 오후 6시
문의: 010-3163-1673

북한 핵실험 파장 – 어디로 나아가는가?

충남대
10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 반도》 저자)
장소: 인문대 103호
문의: 011-9821-3091

한국외대
10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 011-9744-1561

건국대
10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1-1731-2177

강원대
10월 31일(화) 오후 7시
문의: 011-9270-8327

서울 서부지역
10월 31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 반도》 저자)
장소: 모임공간 토츠(신촌역 4번 출구 직진 70미터 아트레온 빌딩 1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1-9997-9084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3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볼리비아

자원 국유화를 둘러싼 투쟁

마이크 곤살레스

지난 몇 년 동안 볼리비아 광부들은 국가와 전투를 치르며 많은 동료들을 잃었다. 쟁점은 항상 똑같았다.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을 공공 소유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였다.

최근에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다. 10월 초에 우아누니 광산 주변에서 광부들이 옛 광부 출신들과 충돌해 광부 16명이 죽었다. 국가 권력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으로 주식 광산이 국유화됐지만, 가장 수익성 높은 광석[주석]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3대 자본주의 기업들 — 수십 년 동안 광산을 개발해 온 — 이 가져갔다.

볼리비아의 주식은 여전히 부(富)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주식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가장 크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우아누니 광산을 제외한 대다수 광산들은 1987년까지 폐쇄됐다.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은 코차밤바 근방으로 가서 코카 재배 농이 되거나 수도 라파스 위의 도시 엘알토로 가서 정착했다.

광산 지대에 눌러앉은 사람들은 협동조합들을 결성해서 광산 지표면 주변의 주석을 굶어모았다.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조건에서 일을 했다.

1990년대에 볼리비아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사실상의 광산 사유화를 은밀하게 추진했다. 2000년에 볼리비아 정부는 영

국 기업 ADM(Allied Deals Minera)과 계약을 맺었다. 볼리비아 국가가 소유한 우아누니 광산의 주식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ADM은 1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공사(公私) 합작기업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주석

그러나 ADM은 그 지분을 유명회사인 RBG에 매각했고, RBG는 2002년에 부도가 났다. 자연히, ADM이 약속한 투자는 실현되지 않았다. 4년 뒤 법원은 파산한 RBG의 청산인으로 그랜트손톤[다국적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그 지분의 공개 매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4년 전에 우아누니의 광부 노조는 민간 투자자들이 디폴트[채무 이행 불능] 상태이므로 기업 전체가 다시 국영 광산회사인 코미볼에 귀속돼야 한

총과 다이내마이트를 들고 충돌한 광부들

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인근 포코소니 산에서 풍부한 광물 자원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비록 협동조합원들의 다수가 광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더는 광부노조 조합원이 아니었고 광부들의 역사적 원칙 — 볼리비아의 부는 국민 전체의 소유여야 한다는 — 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 가족 기업일 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크고 더 강력한 협동조합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들이 민간 기업들이 이 협동조합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청산인이 매각을 발표하자, 협동조합원들이 광산으로 달려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요구하며 광산의 일부 시설들을 탈취하려 했다. 피케팅을 하는 광부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이 광

부들은 광산이 국유기업인 코미볼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어떤 명목을 내세우든 사유화에 저항할 것임이 분명했다.

뒤따른 충돌 과정에서 16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피켓라인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의 아이러니는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자신이 광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의 광산부 장관 월터 비야로엘은 전국 협동조합기구의 의장이었고,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분명히 수수방관했다. 결국 비야로엘은 해임됐고 새 장관이 임명됐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영국 청산인이 4년 전 채무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회사의 소유가 아닌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조치였다. 그랜트손톤 영국 지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볼리비아연대운동(Bolivia Solidarity Campaign)의 요구처럼, 그랜트손톤은 지분 매각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유명회사

더 장기적으로는, 누가 볼리비아의 자원, 특히 광산·석유·천연가스를 소유하는냐가 쟁점이다. 에보 모랄레스는 이런 자원들이 모두 볼리비아 국민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볼리비아 정부들이 줄기차게 추진한 사유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뒤집는다는 것을 뜻했다. 소규모 민간 협동조합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들 뒤에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있고, 그들은 이미 잇달아 모랄레스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늘날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는 부의 원천으로서 훨씬 더 큰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아누니에서 벌어진 전투를 보면, 광산 국유화라는 상징이 광부들이 혁명을 주도한 1952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의 저자다.

베이루트 국제저항 회의

부시가 이라크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레바논 민중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맞서 거둔 승리는 중동 전체의 민중뿐 아니라 전 세계의 반전 세력에 커다란 자신감과 영감을 주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인 지난 8월 19일 카이로 국제반전회의의 조직위원회는 긴급회의에서 레바논인들과 연대하기 위한 베이루트 국제저항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집트의 반전 운동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 결정을 지지했다.

얼마 전에는 헤즈볼라·레바논공산당·국민연합트리분·레바논민중운동·사미둔 등 레바논 현지의 주요 사회단체들이 준비위원회를 꾸

리고 국제적인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세계 곳곳의 반전 운동 세력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반전 활동가들, 사회주의자들, 아랍 민족주의자들, 이슬람주의자들이 모두 한데 모여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을 토론할 것이다.

‘다함께’는 이 회의에 참가해 레바논 민중의 반 제국주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 반전 운동의 미래를 토론할 계획이다.

■ 회의 일정

2006년 11월 16일(목)~19일(일)

장소 : 레바논 베이루트

무슬림을 속죄양 삼는 유럽 지배자들

최근 <뉴욕 타임스>는 “유럽이 무슬림 소수자 문제에 관한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듯하다”고 보도했다. 갈수록 많은 주류 정치인들이 “이슬람과 유럽적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예로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에서 무슬림 이주자들을 공격하는 극우 정당들의 득표율이 높아진 것을 들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무슬림 이주자들은 계속 차별받아 왔다. 그러나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차별의 강도와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유럽에서 이슬람 마녀사냥이 횡행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무슬림들은 올 2월에 덴마크의 인종차별 만평에 분노를 나타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 9월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슬람을 공격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주요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 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전체주의’를 들먹이며 무슬림들을 문제 삼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무슬림 자신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지배자들이 자신의 의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슬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무슬림 공격 사례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 준다.

베일

노동당 정부의 전 외무부 장관 잭 스트로는 무슬림 여성의 베일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진정한 대화를 가로막고, 그 때문에 무슬림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있으므로 무슬림 여성들은 베일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적은 영국의 무슬림들을 소위 ‘영국인다운 삶’에 맞추기를 거부하는 “분리주의적” 소수자로 그리면서,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슬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내세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여러 인종들은 거주지별로 분리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서로 섞이고 있다. 맨체스터대학교의 루디 심슨 박

사는 2001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인종적으로) 혼합된 거주지의 수는 1991년 2001년의 10년 동안 9백64개에서 1천74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저지연합의 린지 저먼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인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여성의 권리를 들먹이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여성해방을 추구하려면 여성들이 언제 무엇을 입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재앙에 빠진 전쟁을 감추기 위해 무슬림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이 여성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사실, 무슬림 여성에 대한 잭 스트로의 비난은 대화를 하려는 순수한 시도가 아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이 이슬람 혐오를 악화시킨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지난 8월 토니 블레어는 이슬람을 ‘전체주의’와 연관지으며 “서구의 가치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당 장관들의 추가 공격을 고무했다.

따라서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이 아니라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인종차별 공격을 고무하고 있다.

노동당 장관들은 ‘분리주의적’ 무슬림이라는 신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쟁을 ‘급진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한 시도로 정당화하려 한다.

런던 동부 소재 타워 햄릿츠의 리스펙트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 라니아 칸은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노동당은 전쟁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다. 그들은 다른 좌파와의 논쟁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혐오와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우파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 이것이 인종차별이 증가한 이유다.”

인종차별

실제로 그들의 발언 이후 인종차별 폭력이 늘었다. 스트로의 주장 이후 풀커크의 이

슬람센터가 방화됐고, 프레스톤의 한 모스크에 주차된 자동차가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파손됐다. 한 10대 무슬림은 칼에 찔리기도 했다. 리버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남성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며 한 무슬림 여성의 베일을 강제로 벗겼다.

우익들도 이에 질세라 무슬림을 공격하고 나섰다. 보수당 당수 데이빗 캐머런은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무슬림 계토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그 날 밤에 원저의 무슬림들은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명백히 심각한 상황이며, 무슬림을 잠재적 또는 현재의 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노동당의 제국주의적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이 재앙에 빠지자, 노동당 정부는 국내에서 ‘적’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영국 반전 운동이 보여 줬듯이,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토니 블레어와 잭 스트로에 맞서 서로 단결할 수 있다. 인종차별 공격에 맞서 무슬림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따른 사망자 수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의 저명한 의학전문지 <랜싯> 최근 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무려 65만 5천 명의 이라크인들(이라크인 40명 중 1명꼴)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최대 추정치는 79만 4천 명이다.)

이 수치는 최근 이라크 정부가 발표한 수치(4만 4천~4만 9천 명)보다 12배 이상 많고 2005년 12월 부시가 언급한 “3만 명”의 약 22배나 된다.

이라크

65만 5천 명이 사망하다

보고서는 사망자의 31퍼센트(18만 6천 명)가 미군과 “연합군”의 직접적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60만 1천 명이 폭력으로 사망했고, 5만 4천 명이 질병과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때문에 사망했다. 사망 원인이 된 폭력은 대개 ‘총

격, 연합군의 공습, 차량 폭탄’ 등인데, 이런 종류의 폭력은 미군 점령 이전까지 이라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부시는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불쾌해 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조사들보

다 광범하고 정확한 표본 조사(이라크 현지 의사들이 참가했고 팔루자 등 기존에 조사하지 못한 지역이 포함됐다)를 통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파이낸셜타임스>조차 “이번에 발표된 사망자 조사는 근래 어떤 연구보다도 종합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썼다.

고작 3년 반 남짓한 기간에 미국은 자신이 전복한 독재 정부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 ‘휴먼라이츠워치’는 후세인 정권 24년 동안 25만~29만 명 가량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 민간인을 살해했다.

김용민